여야, '대화록 대선전 유출' 진위공방

새누리, 정국 불리 당혹감 속 강경대응 분위기 반전 시도

민주 '국정원-與 범죄커넥션' 총공세…박대통령 사과 요구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에 이어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에 대화록을 입수,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정국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는 와중에도 진위 공방을 펼치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정국에 불리한 소재가 새롭게 등장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강경대응으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범죄커넥션'이라고 규정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전날 민주당이 권영세 주중대사의 것이라며 음성파일을 폭로한 데 이어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수세 국면에 몰렸지만 "노 전 대통령이 NLL를 포기하려 한 본질이 중요하다"며 쟁점이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화록 공개 후 역사적 진실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다짐보다 음습한 얘기만 난무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제는 한 술 더 떠 음성파일 100여개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도청 전문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대선 때는 온갖 보고서가 난무하기 때문에 총괄본부장으로서 여기저기서 갖다주는 문건을 보고 얘기했을 것"이라면서 "이미 정문헌 의원도 대화록 내용을 공개해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NLL이 우리의 영토선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아직도 과거 잘못된 정상외교의 뒤처리를 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에서 "NLL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저런 사람들"이라며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 전에 입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공작에 의한 관권선거'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나아가 '배후·몸통설'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지난 대선을 전후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실행한 탈법적인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박정희 시대의 '중정(중앙정보부) 정치'가 부활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범죄커넥션의 배후와 몸통을 밝힐 것"이라며 "불법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신발끈을 조여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정문헌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정원 바로 세우기'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하고 30일 서울에서 예정된 당원보고대회도 규모를 확대하는 등 원내·외 병행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원들에게는 7월과 8월 두달 간 공적인 해외 출장을 제외하고는 외유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기현,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대화록 공개, 최고존엄 우롱"

조평통 대변인 "신뢰 논할 체면 있는가" 비난

정부, 대응 않기로

북한이 27일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괴뢰보수패당이 우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뇌 상봉 담화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입장 발표는 지난 24일 대화록이 공개된 이후 사흘만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번 담화록 공개가 청와대의 현 당국자의 직접적인 승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은 물론 이번 담화록 공개사건도 다름아닌 현 '정권'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 때 그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종북'을 문제시하려 든다면 역대 괴뢰당국자치고 지금까지 평양을 방문했던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또 "괴뢰보수패당이 말끝마다 '신뢰'요 뭐요 하지만 가장 신성시해야 할 북남수뇌분들의 담화록까지 서슴없이 당리당략의 정치적 제물로 삼는 무례무도한 자들이 그 무슨 신뢰를 논할 체면이 있는가"라며 "도대체 (남측이 말하는) 수뇌상봉, '정상외교'의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늘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 위협적 언사를 했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구태의연한 언사를 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노무현재단 "명예훼손 법적 대응"

노무현재단은 27일 "10·4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왜곡·날조돼 유통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을 조사하고 국가정보원 개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완 이사장은 이날 재단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언급하고 "정상회담의 발언을 왜곡·날조한 새누리당 정문헌·서상기 의원과 기록물 불법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또 "허위사실 유포로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유족과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고인을 헐뜯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무성 '대화록 해명' 논란

"정문헌 의원 설명 등 종합해서 만든 것" 불구

작년 대선 부산 유세 발언 대화록과 거의 일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대선에 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선 당시 김 의원의 부산 유세 발언이 최근 공개된 대화록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특히 김 의원 측의 해명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할 조짐이다. 김 의원 측은 지난 26일 '대선 과정 대화록 입수 발언'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정문헌 의원의 설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NLL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만든 문건을 보고 부산 유세에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거리 유세에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한 말"이라며 문건을 꺼내 읽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정상회담 회의록과 비교하면 문맥뿐 아니라 단어의 위치까지 거의 같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작전계획 5029라는 것은 미군 측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고 소개했는데 이 발언도 대화록에 그대로 나와있다. 도저히 원문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나아가 김 의원의 해명에서 나오는 노 전 대통령의 민주평통 연설문(2007년 11월1일)에서는 비슷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NLL 문제와 관련해) 합의 안 한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든 NLL은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 "목숨 걸고 지킨 우리의 방위선 또는 영토선이라고 얘기합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에게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 해도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6개월 전 이미 관련 내용이 유출돼 여권 내에서 공유됐다는 의미여서 파장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대화록 사전 유출 국조서 다뤄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7일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새누리당의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까지 포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정원의 대화록 전문공개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했는데, 국익보다 국정원의 명예가 중요하다는 것이냐.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록 내용 논란과 관련해 "보기에 따라 일부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회담 이후) NLL이 전혀 훼손되지 않지 않았느냐"라며 "내용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3타경 2819	1	목포시 산정동 1322-22 115.7㎡	대	62,878,900 62,878,9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임차인있음
		목포시 둥근섬로39-1 주택39.67㎡[현황:조적조세멘기와및슬래브지붕의1동건물로실측연면적은81.3㎡] 점포및주택20.52㎡ 부속건물 변소및창고4.56㎡ 제시외화장실2.5㎡	단독주택 등		
[대지/임야/전답]					
2012타경 10769	1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1376-5 2614㎡[공유자최연수지분4분의1전부]	답	10,456,000 10,45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2타경 14730	1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515-30 2701㎡[현황:건부지][제시외건물[현장사무소]매각제외]	전	113,442,000 113,44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임차인있음
	2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1965-2 2122㎡	답	57,294,000 57,29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1965-9 2122㎡	답	57,294,000 57,29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431	1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511 1349㎡	답	107,920,000 107,920,000	일부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
	2	동소 905 816㎡[진경찬지분전부[지분6분의1]][일부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	전	16,320,000 16,320,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3타경 752	1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94 3656㎡	답	12,064,800 12,064,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401 832㎡	답	3,124,600 3,124,6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2,3번]
		동소 401-1 87㎡[현황:일부농로]	답		
	3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리 106-1 1974㎡	전	8,392,700 8,392,7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4,5번]
		동소 106-2 1541㎡[현황:일부대지][제시외건물매각제외.임차인있음]	전		
2013타경 3225	1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7 2126㎡	전	32,740,400 32,740,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1268-33 992㎡	전	11,705,600 11,705,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3타경 3294	1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76-16 132㎡[현황:상업나지][박용지분2분의1전부]	답	41,646,000 41,646,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3타경 3355	1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374-25 834㎡[현황:전][농지취득자격증명요]	임야	108,420,000 108,420,000	매각외비닐하우스소재
2013타경 3416	1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5 330㎡[현황:주거나지]	전	184,814,000 184,814,000	일괄매각.일부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목록1,2번]
		동소 686 839㎡[현황:주거나지]	전		
2013타경 4280	1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745-4 1629㎡	답	72,098,000 72,098,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1,2번]
		동소 745-5 3917㎡	답		
	2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144-2 2045㎡	답	49,620,000 49,620,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3,4번]
		동소 144-3 2090㎡	답		
[자동차,중기]					
2013타경 1021	1	사용본거지: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28길 19 ,B02[봉천동] 등록번호:02누1784 차명:투싼[TUCSON] 년식:2004	자동차	7,000,000 7,000,000	보관장소:무안군 일로읍지장리535[010-7115-5576]
2013타경 4938	1	사용본거지:강진군 도암면 월하2길206 등록번호:전남98사3811 차명:스카니아트랙터 년식:2004	자동차	40,000,000 40,000,000	보관장소:무안군 일로읍지장리535[010-7115-5576]
[기타]					
2012타경 12376	1	선적항:여수시 선박의종류와명칭:기선동인에이-1호 선질:강 총톤수:25톤 기관의종류와수:디젤기관2기 추진기의종류와수:나선추진기2기 진수년월일:2000년2월 정박지또는보관장소:목포항[신외항]:주식회사미진해운[051-416-6999]	선박	70,346,000 70,346,000	의장품포함평가
	2	선적항:여수시 선박의종류와명칭:부선동인6호 선질:강 총톤수:714톤 기관의종류와수:없음 추진기의종류와수:없음 진수년월일:1971년 정박지또는보관장소:목포항[신외항]:주식회사미진해운[051-416-6999]	선박	3,765,000,000 3,765,000,000	의장품포함평가.배사관은평가에서제외.주기관등수리를위하여일부해체되어있음
2013타경 3751	1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511-3 2440㎡	대	239,899,780 239,899,7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임차인있음.3,4번각창고[204.9㎡]:2개동중1개동은건축물대장상미등재이며,1개동으로이용중.목록3~4[현황:샌드위치판넬지붕]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42 661㎡ 부속건물 사무실 102.45㎡ 수위실 16.85㎡[현황:멸실] 주택 46.26㎡[현황:멸실] 변소 17.51㎡[현황:창고] 제시외 창고 등 15.65㎡ 창고 컨테이너조 1식	공장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511-3 1호 204.90㎡	창고		
		동소 511-3 2호 204.90㎡	창고		
		동소 511-3 3호 56.18㎡[현황:블록조스레트지붕]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3. 7. 15.[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3. 7. 22.[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ㅁ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사 정원석 사법보좌관 박영석